

메가프로젝트는 답이 될 수 없다

최민 상임활동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3대메가프로젝트는 삼성과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산업에 정부도 함께 사활을 걸고 기업 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해 주고, 나아가 AI 데이터센터, 퍼지컬 AI 산업을 발전시켜 대한민국을 반도체와 AI 강국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휘황찬란해 보이지만, 메가프로젝트는 여러 측면에서 우려가 크다. 환경과 생태에 미치는 부담이 매우 커서 세계적으로 비판과 회피의 대상이 되는 AI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산업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인프라에 대한 과잉 투자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어 보인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측면에서도 메가프로젝트는 답이 될 수 없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성찰과 규제 의지 없는 메가프로젝트

수십 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반도체 회사

노동자와 공장 인근 지역 주민은 건강 문제를 겪으며 화학물질과 보건 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주장했고, 기업은 영업 비밀을 내세우며 이런 호소를 무시해 왔다. 목소리가 더 커지면, 기업은 화학물질이 해롭다는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고, 환경 피해나 노동자 건강 피해를 연구하고 모니터링하는 대신 ‘녹색’ 이미지를 선전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부는 기업의 편을 들며 노동자와 시민에게 적대적이었다.

한국에서도 반올림과 반도체·전자산업 노동자들, 그리고 이에 연대하는 노동자 시민들은 똑같은 역사를 밟아가며 투쟁해 왔고, 그 덕에 우리는 ‘청정 산업’이라고 알려져 있던 반도체 산업이 얼마나 많은 유독성 화학물질을 사용하는지 알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혈액암과 같은 희소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지금도 반도체 산업의 사고와 위

험은 계속되고 있다. 올해 6월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6월 1일 불화수소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 11명이 치료를 받고 3,600여 명이 대피했다. 6월 10일에는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 누출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뒤늦게 6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반도체 사업장 27곳에서 산업 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집중 점검을 벌여 법 위반 사항 총 338건을 적발했다. 주로 사고가 발생했던 SK하이닉스 청주 캠퍼스에서 문제가 됐지만, 그 외 26개 사업장에서도 과태료와 시정조치가 총 219건 나왔다. 삼성이 반올림과 피해 노동자, 한국 사회에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하며, 반도체 산업은 이제 달라졌고 안전하다고 공언한 뒤 8년이 지난 올해 벌어진 일이다.

AI발 반도체 호황에 한국 사회 전체가 흥분하고 있지만, 이렇수록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안전보건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만들다 뇌종양에 걸린 한혜경 노동자의 어머니인 김시녀 님은 전화 통화에서 “반도체 만들면서 노동자 희생이 너무 컸다. 장애를 입고, 죽어간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전국 여기저기서 반도체를 만든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올림이 삼성 본관 앞에서 농성할 때도 여러 번 왔었는데, 왜 이러는지 답답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지키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이미 위험이 드러난 반도체 산업에 온갖 규제 혁파를 내거는 메가프로

젝트로 지킬 수 없다.

AI 도입이 노동자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먼저 살펴라

이런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의 배경이 되는 AI 대세론과 여기에 올라타 AI 강국이 되겠다는 계획도 찬찬히 뜯어봐야 한다. AI가 단순 업무를 도와주고, 노동자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하지만, 어떤 AI가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결과는 매우 달라질 수 있다. 줄어든 업무만큼 다른 업무가 부가되어 노동강도가 오히려 높아지거나, 단순하고 쉬운 업무를 털어내고 더 어렵고 까다로운 업무가 남는 경우도 많다. AI 도입 여부와 방식을 노동자가 정하지 못하는 사업장에서 이런 일은 더 쉽게 발생한다. 챗봇과 AI 상담 적용으로, 더 어려운 상담 업무를 맡게 되는 콜센터 노동자의 경우가 그렇다. 어떤 콜센터에서는 향후 AI가 목소리로 상담자를 인지할 수 있도록, 고객의 ‘성문(사람마다 가진 고유한 목소리) 인식 등록’을 요구해야 하는 일을 떠맡기도 했다. ‘AI를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노동’이 인간 노동자에게 추가된 셈이다.

일터의 위험을 미리 확인하거나, 노동자 안전 훈련 활용 등 일터 안전을 위해 AI가 사용될 수도 있지만, AI가 가져올 수 있는 안전보건상 위험도 여럿 있다. 안전보건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AI-스마트 안전장비를 몸에 부착하고 일하면서, 지속적으로 생체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기기 때문에 압박이나 불안을

호소하는 노동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측정된 정보를 회사가 성과 평가, 노동 통제 등에 활용할 수도 있지만, 사전에 개별 노동자가 이를 알고 막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건강과 관련된 민감한 생체 정보를 대량으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프라이버시 문제, 정보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피지컬 AI도 마찬가지다. 이미 한국은 로봇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사회다. 로봇에 의한 끼임 사고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가장 흔한 중대재해 원인이다. 센서가 작동하지 않아서, 청소나 정비 중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아서, 노동자 간 소통이 잘되지 않아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중대재해가 반복된다. 피지컬 AI 개발과 생산, 사용을 선도한다는 전망을 내놓기 전에, 이미 발생하고 있는 로봇으로 인한 사고의 근본 원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다.

그런데 정부의 메가프로젝트에서 노동과 관련한 고민은 ‘일자리’ 정도이고, 해결책은 일자리를 옮겨야 할 노동자들에게 ‘AI’ 기술을 가르치고 전직을 쉽게 한다는 방안이다. 그나마도 9월 초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따르면 AI 도입 자체는 의무 교섭 대상도 아니다.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정리해고 등이 예상될 경우 혹은 ‘계획이나 결정’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교섭 대상이 된다. 노동자들은 신기술 도입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고, 도입이 결정된 후 그 결과에 대해서만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인가?

전 세계적으로 AI 도입에 대한 고민을 먼저 시작한 노동조합들은 단체협약에 ‘AI 도입으로 인한 해고나 인원 감축은 없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분명하게 담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안전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역시 마찬가지다. 회사 측이 새로운 기계나 로봇,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도입을 결정하기 전 이 변화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전에 검토하고 협의해야 한다. 정부도 AI 개발 속도나 AI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입 속도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신체적, 심리적 부담에 관한 연구나 위험요인 감축 방안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노동권 박탈하는 메가특구법, 속도전 전격전 아래 노동자 안전은?

이처럼 반도체 산업, AI 산업을 묻지마 식으로 지원한다는 것도 답답한 노릇인데, 그 프로젝트를 ‘속도전’, ‘전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정부의 선전 문구는 더욱 우려스럽다. 발주자로부터 내려오는 공사 기한 압박은 건설 현장에서 사고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로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설정하여야 한다.”라는 의무가 규정된 게 2021년의 일이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정부가 나서서 흔들겠다는 것인가?

반올림 이상수 활동가는 9월 19일 열린



▲ 2026.8.11. 메가특구법 철회 촉구 기후노동시민사회정당 기자회견. 사진: 한노보연

기후정의행진 사전 집회 ‘메가프로젝트 저지 공동 결의대회’ 발언에서, “속도전을 추구할 때 가장 먼저 뒤로 밀리는 것이 노동자 안전”이라며, “전격전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메가특구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또 부실한 안전조치 후 급하게 문을 여는 반도체 공장에서 죽거나 다칠지 너무나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메가특구를 건설하는 과정에서만 노동자 안전과 건강이 우려되는 것이 아니다. 메가특구에서 노동, 환경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겠다는 메가특구법의 내용 역시 심각하다. 노동계와 시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 예외’ 조항은 물론이고, 파견이나 기간제 노동자 확대 방안도 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위협한다.

2024년 리튬배터리 폭발 사고로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화재 참사에서 사고를 키운 요인 중 하나는 불법 파견노동이었다. 사망한 노동자 대다수가 불법적인 파견 노동자 신세로, 본인들이 다루는 리튬 배터리의 폭발 위험이나 비상구의 위치도 제대로 교육 받지 못한 채 일하다 숨졌다. 그런데 메가특

구에서는 파견법을 확대해 주겠다고 한다.

기간제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재계약 때문에 산재가 발생해도 신고하지 못하거나, 위험 상황을 거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불안한 고용이 위험을 키운다. 그런데 2년으로 제한된 기간제 노동을 4년까지 확대하겠다고 한다. 안전에 대해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기간제, 파견 노동자로 메가특구를 채워 어떤 위험을 감수하며, 어떤 이윤을 좇으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정부가 하려는 산업혁명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한국형 AI 산업혁명’이라 부르자고 한다. 산업혁명 시기인 1841년 리버풀과 맨체스터 같은 영국의 도시 노동자들의 기대 수명은 26세가 채 되지 않았다. 하루 16시간가량의 가혹한 노동시간, 열악한 주거와 위생 환경, 새로이 도입된 거대한 기계 장치에 의한 산업재해 등이 노동자 수명을 깎아 먹은 주된 원인이었다. 이재명 정부가 하려는 산업혁명은 어떤 산업혁명인가? **알터**